

光州日뢖





1952년 4월 20일 창간 제22597호 1판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음력 8월 25일 2025년 10월 16일 목요일

'RE100 산단' 광주·전남에 조성 법적 토대 마련

민주당 정진욱·김원이 의원 등 특별법 제정안 대표 발의 광주·전남 '상생'으로 산업생태계 약점 보완·강점 극대화

광주·전남지역이 '친환경 에너지 100% 제품'을 생산하는 RE100 산업거점으로 도약할 법적 토대 가 마련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양 지역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요금 감면·조세특례·정주여건 개선 등 인센티브를 누릴 수 있어 AI 데이터센터와 첨 단 제조 산업 유치도 탄력을 받게될 전망이다. 광 주시와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지산지소' (地産 地)에너지를 생산한 지역에서 소비) 정책의 선 도 지역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광주동남갑) 의원 실에 따르면 정 의원은 'RE100 산업단지 특별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법안 골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공급과 친환경 산업입지를 한 묶음으로 설계 해, 재생에너지지구·전력망지구·산업지구·정주지 구를 통합한 RE100 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전 기요금 감면, 주택공급·임대 우선, 인재양성 같은 특례를 패키지로 묶어 유망 기업을 선제 유치하도 록 법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있다.

기업이 통상 40M급 데이터센터 운영에 연간 400억원 안팎 전기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에서 요금 특례는 투자 유치 경쟁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에너지 사용 특례를 바탕으로 삼성 등 대기업과 투자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 김원이(목포) 의원도 지난 12일 전남에 RE100 산단을 구축하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 특별법' (가칭)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소비를 한 도시 안에 선순환시키는 신도시형 모델을 제시하고, 산업시설지구(산단)와 배후정주지구(주거), 재 생에너지집적화지구, 분산형전력망지구를 한 체 계로 지정·관리하도록 명문화했다.

입주기업에는 '저렴한 재생에너지 구매-사용'을 가능케 하는 전력공급 체계와 함께 조세감면•부담금 완화•정주 인프라•외국인근로자 우선 입주특레 등이 조문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전남 서남권의 해상풍력·태양광과 연계해 오픈AI·SK 합작 AI 데이터센터 같은 빅프로젝트를 끌어들이는 가고 법안으로 작용할 것이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기독교명문대학 광신 대학교 www.kwangshin.ac.kr 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광주·전남 '상생'이 공 통분모다. 전남은 '대규모·대면적·해상형' 재생에 너지 생산을, 광주는 '내륙·도시형·영농형' 분산발 전을 축으로 한 산업생태계를 구축해 서로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지향한다.

예컨대, 광주에 RE100 산단이 들어서면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안정적 수요처가 확보되고, 광주는 저탄소 전력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우는 선순환이 가능해진다.

전남은 서남권 해상풍력과 대규모 태양광 등 '대량·대면적 발전이 가능한 자원 우위'를 살려, 재생에너지 생산·집적·송전 인프라를 담당한다.

최종적으로 전남이 '대규모 전력생산 허브', 광 주는 '도시형 수요·활용 허브'로 역할을 나눠 '호 남산 전기→호남 소비'의 지산지소를 완성하는 그 림이다.

이 구조가 자리 잡으면 전남·제주 등지에서 송 배전망 포화로 재생에너지 출력을 줄였던 병목도 완화되고, 전력망 보강 부담이 분산될 것으로 기 대된다. 구체적으로 광주에 RE100 산단 틀이 갖춰지면 국가 AI컴퓨팅센터(최대 GPU 5만 장) 같은 전력다소비 디지털 인프라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 후속 투자(반도체·서버 부품·액체냉각·전력솔루션) 유인을 높일 수 있다.

전남의 경우 해상풍력·대규모 태양광 개발지와 배후도시·산단을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엮으 면, 발전사업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료 인하, 저 리 정책금융, 지능형 전력망 지원 같은 제도적 기 반이 마련된다.

정진욱 의원은 "RE100 관련 법안은 양 지역을 에너지 자원과 활용을 극대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광주의 경우 국가AI컴퓨팅센터가 입지할 산단을 재생에너지 자립산단으로 간주해 전력요금 등 지원을 적용하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만큼 법안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는 과정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광주·전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꼰대들의 대학원 - 노동자도 학생도 아닌… ▶6면

유해란·이소미·김세영 고향서 우승도전 ▶18면

팔도 핫플레이스 - 화순 개미산·꽃강길 ▶22면



추억의 충장축제 개막 15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일원에서 '추억의 동화'를 주제로 제22회 추억의 충장축제가 개막했다. 오는 19일까지 닷새간 이어지는 올해 축제에서는 동화적 요소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관련기사 12면 /나명주 기자 mjna@

지방은 또 외면당한 부동산 대책

수도권 아파트만 집중 육성

침체한 지방 부동산 대책 없이 국토균형발전조 차 외면한 '수도권 맞춤형' 부동산 대책이 또 나왔 다. 〈관련기사 8면〉

정부는 15일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지방은 또다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 지역인 강남3구·용산구를 포함한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삼중 규제 지역'으로 묶고 금융 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구 단위가 아닌 시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광범위하게 묶인 것은 이 번이 처음이다. 집값이 과열이나 과열 우려가 나 타나는 한강벨트와 분당·과천 등 일부 수도권 외 인근 지역으로의 '풍선 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 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의 세 차례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비수도

권 건설·부동산 업계의 시선은 곱지 않다.

정부가 수도권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수도 권 아파트 집중 육성' 정책만 쏟아내는 바람에 그 동안 공들여 온 수도권 인구 지방분산 정책 등 국 토균형발전 위한 여러 성과마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지방 부동산이 무너지면 지역 건설 경기뿐 아니라 일자리, 소비 등 전반적 경제 구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면서 "이미 다수의 건설업체가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135만호건립 발표 이후 침체한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포스코와 대우건설이 수익성 등을 이유로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내 45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포기한 게 그 사례"라고 경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캄보디아 당국 "한국인 80여명 구금 중…귀국 거부",

위성락 "60여명 주말까지 송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에 다수 한국인이 구금된 상황과 관련해 "캄보디아 단속에 의해 검거된 한국 국적의 범죄혐의자 60여명을 조 속히 송환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며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캄보디아 스캠 산업(사기행위로 조 직·운영하는 범죄 활동)엔 다양한 국적 20만명이 종사하고, 한국인은 1000명 남짓으로 본다. 최근 단속으로 수천명이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항공편을 준비 중이며 절차 협의 속도에 변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양국은 수사당국이 참여 하는 '스캠 합동대응 TF' (캄보디아 20명+한국 4 명)를 꾸려 집중 작업에 나선다.

한편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한국인 80여명이 구금 중이며 접촉했지만 일부는 한국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다시 윤빛 도는 피부 설화수 윤조에센스



